

“청년국민연금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GRI 정책 Brief

김도균 연구위원(정책분석부)
dkkim@gri.re.kr, 031-250-3121
김재신 연구원(정책분석부)

목차

- I. 도입배경 및 쟁점
- II. 설문조사 결과
- III. 제도분석
- IV. 정책제언

Brief 정책 브리핑

GRI 정책 Brief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신속하고 실용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정책브리핑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 쇄 2019. 4

발 행 처 경기연구원

발 행 인 이한주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 화 031-250-3114

홈페이지 www.gri.kr

정 책 제 안

□ 「경기도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해 청년세대에게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

-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청년의 국민연금 배제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은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 본 사업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경기도에서 첫 달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에 대한 만 18세 연령집단과 저소득계층에서 높은 참여의향과 긍정적 기대가 나타나 사업 추진 필요성 높은 편(*경기도민 1,000명 설문조사)

-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인 만 18세 연령집단과 1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에서는 사업 참여 혹은 참여 권장 의향이 각각 5점 만점에서 3.52, 3.50으로 높게 나타남
- 젊은 세대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이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노후준비 중요성,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회복, 연금수령액 증가, 조기가입 기회의 공정성 확대 등 경기도 사업에 거는 긍정적 기대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목표를 명확히 하고, 형평성 문제, 사회보험 원리 훼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 필요

- 추납제도는 학업기간 등으로 부득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나 사회보험 운영원리 훼손 등의 문제는 사실상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
- 국민연금 성실납부 청년 대상 지역화폐 포인트 지급, 청년층 대상 국민연금·노후준비 교육 등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
- 청년국민연금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 있음
- 청년국민연금사업은 청년층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실험으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토대로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긍정적 효과가 크다면 타지자체로 확산하여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 있음

I. 도입배경 및 쟁점

1. 도입배경

□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저조현상

- 청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 가입률과 보험료 납부율은 가장 낮은 연령층으로 수급권 확보에 어려움 예상
 - 18~34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7,269천명)는 18~59세 경제활동인구(23,071천명) 가운데 1/3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지만, 실제로 청년층은 비청년층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률 및 보험료 납부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인구 대비 가입률은 청년층(18~34세)이 비청년층(35~59세)보다 약 5%p 낮으며, 경제활동인구 대비 보험료 납부자 비율의 경우 청년층과 비청년층이 각각 60.2%와 71.6%로 11.6%p의 차이
-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경우에도 우리나라 20대 미만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상당히 저조함
 - 우리나라의 20대 미만 총인구 대비 공적연금 가입률은 3.4%로 영국(23.2%), 미국(11.1%), 일본(6.1%)보다 낮게 나타남(국민연금연구원, 2016)
 - 또한, 우리나라 20대 총인구 대비 가입률은 35.1%이며, 경찰인구 대비 가입률은 58.1%로 미국의 20대 총인구 대비 가입률 78.2%, 경찰인구 대비 가입률이 103.4%에 비해 적은 수치이며, 영국과 일본의 20대 총인구대비 가입률 79%, 94.1%, 경찰인구 대비 가입률 99.6%, 120.3%보다 상당히 적은 수치임(국민연금연구원, 2016)

〈표 1〉 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률 및 보험료 납부비율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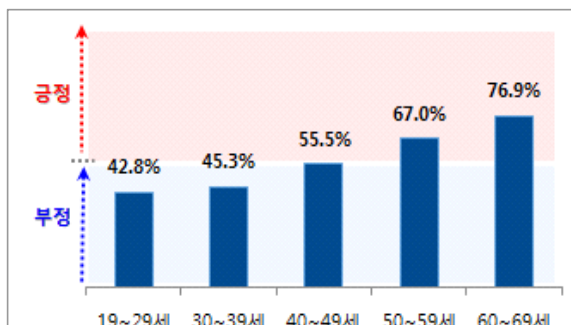
구분	총인구	경찰인구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납부자	총인구 대비 가입률	경찰인구 대비 가입률	총인구 대비 보험료 납부자	경찰인구 대비 보험료 납부자
18-34세	11,300	7,269	6,466	4,377	57.2	88.9	38.7	60.2
35-39세	3,841	2,897	2,776	2,028	72.3	95.8	52.8	70.0
40-49세	8,431	6,826	6,224	4,691	73.8	91.2	55.6	68.7
50-59세	8,056	6,139	5,880	4,641	73.0	95.8	57.6	75.6

주 : 보험료납부자=국민연금가입자-납부예외자-장기체납자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민연금공단 전산자료 분석(2015년 12월말 기준).

□ (원인1)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의 불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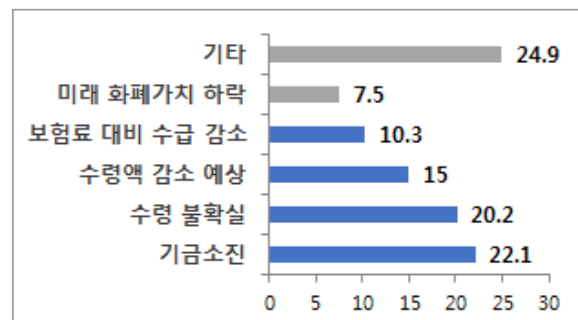
- 청년층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낮으며, 불신 사유는 주로 기금 고갈과 관련 있음
 - 국민연금공단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연금 불신에 대한 응답의 상위 4개 항목(67.6%)은 모두 기금 소진으로 인한 불신인 것으로 나타남(국민연금공단, 2014.12).
 - 국민연금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금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응답 비중이 증가하며, 특히 20·30대는 기대수준이 부정적이며 40대를 기점으로 긍정적인 기대수준으로 응답하여, 연령별 기대수준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자유와 안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2019)
- 국민연금에 대한 낮은 신뢰와 노후준비 시의성의 체감도가 낮은 경향으로 청년은 정규 취업 이전에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 가입을 스스로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
 - 청년은 정규 취업 이전에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도 미래의 노후를 위해 임금을 유보하기 보다는 현재의 생활비로 활용하는 경향
 - 실제로는 소득이 있음에도 고의로 소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도 많음(국민연금연구원, 2016)

〈그림 1〉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수준 인식조사



주 : 2018년 1,0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 : 자유와 안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그림 2〉 국민연금 불신에 대한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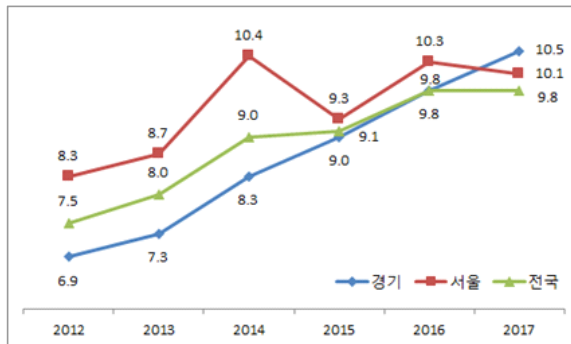


주 : 2014학년도 대학(원)생 55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4.12).

□ (원인2)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고용불안정으로 국민연금 배제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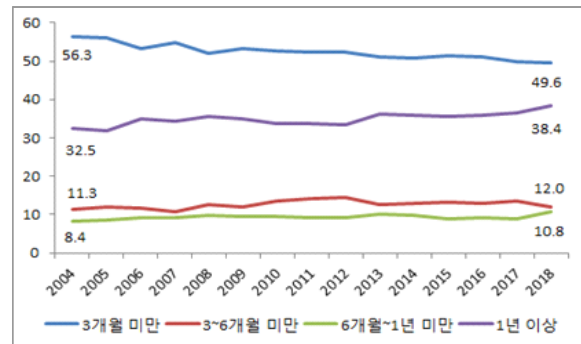
- (청년은 실업률 상승, 입직연령 지연 등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높은 계층) 청년층은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노동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층은 소득활동과 그에 따른 기여를 전제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임
 - 가입이 빠를수록 노후 연금수령액 증가하나 입직연령 지연으로 당연가입 늦어지고 있으며, 당연가입 적용제외자로 관리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편입 및 가입 배제 현상이 발생

〈그림 3〉 청년실업을 추이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4〉 청년층의 첫 취업 소요기간



자료 :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 (국민연금 수급권은 노동시장 참여와 기여를 전제로 성립) 한국의 고용정책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국민연금 배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여와 급여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제도 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임
- 그동안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청년과 같은 노동시장취약계층의 연금수급권 축적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이 전무했던 것은 아님¹⁾. 지난 2012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나,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 등은 불안정한 노동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세대의 연금수급권을 보충해주는 주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 그러나 이들 지원책은 그 적용범위와 보장수준이 미흡하여 한국 노동시장에 착근된 청년세대의 불리(不利) 문제가 연금제도에도 투영되는 상황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표 2〉 크레딧제도

구분	내용	비고
출산크레딧	2008.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 이상부터 12개월(2명)~50개월(5명 이상) 가입기간 추가 인정	국민연금적립기금 70% 국고 30%
군복무 크레딧	2008.1 이후 입대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6개월 가입기간 추가 인정	국고 100%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할 경우,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	국고 25% 국민연금적립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

- (제도 진입 유인방안 마련 필요) 청년고용정책과 같은 국민연금제도 외적인 차원의 노력과 별도로, 제도 내적으로 청년의 제도 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많은 국가에서도 청년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또는 보상기제의 일환으로, 직업훈련·군복무·학업 등의 사유에 대해 다양한 보험료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 크레딧은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또는 실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연금 수급권 확보와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제도

〈표 3〉 청년층을 위한 보험료 면제제도 외국 사례

국 가	내 용
독일	17세 이상 직업훈련, 전문대학 훈련등록 기간에 대해 8년 부여 - 군복무(2011년 징병제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회봉사 전 기간에 대해 부여(최대 18개월)
룩셈부르크	18~27세 사이의 직업훈련 및 학업 기간
루마니아	대학 교육 기간(학업 완료 조건)
스웨덴	학업 기간, 군복무(2010년 징병제 폐지) 등 국가를 위한 의무봉사 전 기간
슬로베니아	학업을 완료한 학부 및 대학원 교육기간
슬로바키아	2004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교육으로 인한 비기여 기간 고려
영국	18세 이상 기술교육에 대해 12개월 부여 - 배우자의 군복무 기간: 군복무자의 배우자이거나 해외로 배치되어 동반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한 기간 (2010년부터 시행)
체코	- 중등학교 또는 대학에서 공부한 기간이 2009년 이전인 전업학생(18세 이후 최대 6년) - 직업훈련 기간 동안 노동시간이 감소한 사람
폴란드	대학 교육 기간

자료 : EC,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 및 각국 홈페이지(크레딧 제도 관련); 유호선(2016); 최옥금(2011).

□ (원인3) 정보와 부의 격차로 발생하는 추후납부제도의 낮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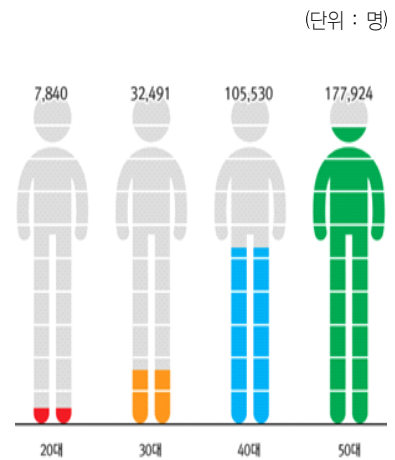
- 국민연금은 만 18~60세 전국민이 가입대상이나, 소득 없는 만 18~27세 미만은 가입제외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나 만 18~27세 미만의 청년과 같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집단들을 적용제외자로 분류하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납부 능력이 있을 때 추후 납부하여 국민연금 기간에 산입
 - 추후납부제도는 가입기간 중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능력 발생 시 다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존에 상실했던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연금수급권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현 「국민연금법」 제6조는 가입대상을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만 27세 이전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 최초 시점인 만 27세 이후부터 추납보험료 납부 가능
- 경기도 만 18세 청년의 임의가입자는 0.05% 불과, 추후납부제도 정보를 아는 소수만 활용
 - 도내 만 18세 청년인구는 165,314명 중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는 9,373명(5.6%), 이중 임의가입자는 81명(0.05%)에 불과한 반면(2018년 7월 기준), 전국 만 18세 임의가입자가 많은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성남시로 나타남

〈표 4〉 국민연금 가입대상

구분		대상자
가입대상 (18~60세)	당연 가입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지역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적용제외자 제외)
	납부예외	실직, 휴직, 병역, 재학, 교정, 감호,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발생으로 보험료 납부 곤란
	임의 가입 대상	적용제외자 중 가입 희망자
	적용제외	국민·지역연금 수급권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연계급여 미신청자) 재학, 병역, 등 18~27세 미만 무소득자(납부이력자 제외)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가입대상 제외	타 공적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수급자(특수직종, 조기노령)
임의계속가입		60~65세 미만인 사람 중 임의계속가입 신청자

주 :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그림 5〉 임의가입자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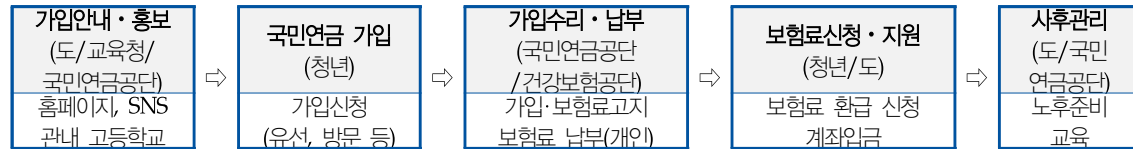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7).

□ (대안) 「경기도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 도입

- 본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경기도에서 첫 달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 이를 통해 18세에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함으로써 납부월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해 납부예외기간을 만들어 추후납부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연금수급액 증가 및 확보 가능
 -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추후납부를 할 수 있어, 만 18세에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취업 또는 사업자가 되어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전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 할 수 없음(국민연금법 제92조)
 - 단, 만 27세 이후에도 소득이 없어서 납부예외자가 되었다가 추후 납부가 가능해진 시점에는 만 27세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추후납부가 가능
 - 즉, 경기도가 만 18세 청년에게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이 국민연금에 조기가입 할 경우 만 27세까지 10년(119회)의 추후납부 기간을 확보하게 되며, 추납 시 연금수령액 크게 증가효과
- 또한, 노후준비교육을 병행하여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제도 및 재무관리 등 미래 설계 준비 도모
 - 지원대상인 만 18세 청년이 향후 취업시장에서 노후준비 및 사회보장제도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강사 활용하여 노후준비 교육을 상설교육, 출장강의,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

【 경기도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 】

- 사업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 157,483명
- 지원내용 : 최초 가입 보험료 9만원 지원 (1회)
- 소요재원 : 도비 100%(2019년 예산추정은 146.6억원)
- 지원절차 : 청년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경기도에서 보험료 지원



2. 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

□ 청년층 내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보완기제 필요

-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실태를 청년 내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활동참여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역시 계속 증가
 - 총인구 대비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8세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20-24세 18.14%에서 25-29세 43.99%로 현격한 차이를 보임
 - 청년들의 입직연령이 28세 정도임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인구 증가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24세 연령계층의 경우 총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지만,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과 보험료 납부자 비율은 낮은 수준
 - 20-24세 연령계층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이 39.40%로 25-29세 연령계층의 55.44%, 30-34세 연령계층의 62.8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0-24세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보험료 납부자 비율은 2.49%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가입자의 대부분이 납부예외자로 남아 있어서 문제가 심각
 - 20-24세 연령계층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라도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 적어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됨
 -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소득보장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가입하고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20대 초반 청년층의 경우 대부분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서 문제가 심각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들 가운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없기 때문에 청년층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표 5〉 연령대별 경기도 국민연금 가입률 및 보험료 납부비율 (2017)

(단위 : 천 명, %)

구분	총인구	경활인구	국민연금 가입자 (A)	납부 예외자 (B)	보험료 납부자 (A)-(B)	총인구 대비 가입률	경활인구 대비 가입률	총인구 대비 보험료 납부자	경활인구 대비 보험료 납부자
18~19세	323	-	22	11	11	6.95	-	3.41	-
20~24세	874	401	158	148	10	18.14	39.40	1.14	2.49
25~29세	846	671	372	154	217	43.99	55.44	25.65	32.34
30~34세	852	707	444	115	328	52.12	62.80	38.50	46.39

주1 : 보험료납부자=국민연금가입자-납부예외자

주2 : 경제활동인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는 5세 간격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18~19세 인구는 추출이 어려움

자료 : 행정자치부(2017),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국민연금공단(2017), 국민연금통계.

3. 쟁점

□ 쟁점1 : 정책대상 및 정책제도관련 형평성 문제는 현행 추후납부제도 자체의 문제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부분으로 경기도 사업과는 무관

- (정책대상)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공적연금제도로 가입 및 급여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특정 연령이나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나, 특정 지역의 연령층을 지원함에 따라 지역 및 연령 간 형평성 초래
- (사회보험)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회성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보험원리에 위배되어, 생애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근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발생 우려
 - 18세 도달한 청년들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여, 납부예외기간을 미리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선택적 가입, 가입회피 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제도로 변질 우려
- (추후납부제도) 현행 제도는 경제적 여력이 되고,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만 이용하고 있어 경제 격차와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 우려
 - 경기도 내에서도 향후에 일시금(혹은 분할납부)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 가입자만이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동일 제도 내에서 소득에 따른 혜택의 양극화 심화 예상
-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현행 추후납부제도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과는 무관
 - 현재에도 추후납부제도는 제도에 대해 잘 알고 경제적 여건이 되는 가입자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중앙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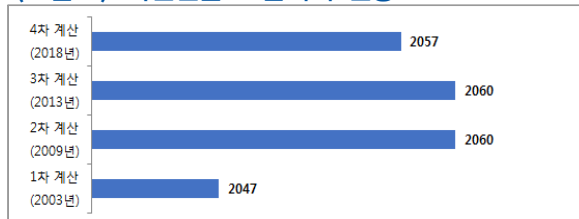
□ 쟁점2 : 재정문제가 지적되나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제도로 가입자 확보도 중요(1인1연금시대로 진입 촉진)

- 국민연금의 급여는 전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및 보험료의 운용수익금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특정 계층의 급여혜택에 따른 재정 부담은 전 국민에게 전가되는 형태
 - 저출산·고령화구조 속에서 국민연금 고갈 위기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비판
 -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용되는 구조로 일종의 세대 간 계약임
- 국민연금법에 따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로 운영되기에 오히려 가입자 확보가 중요
 -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의 타 연금제도와 유사하게 계리적(actuarial) 속성을 띄며 즉, 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당연가입자를 결정하고, 개인의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와 그 수익금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함
 - 노동시장취약계층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연금수급권(노후준비)에 대한 이중적 손실로 개인차원의 문제점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제도운영 측면에서도 재정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상실을 의미

〈표 6〉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운용방식

구분	확정급여방식	확정기여방식
부과방식	전통적 부과방식 (서유럽, 미국)	명목확정기여방식 (스웨덴, 이탈리아)
적립방식	부분적립방식 (개발도상국가)	완전적립방식 (칠레)

〈그림 6〉 국민연금 고갈시기 전망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각년도).

□ 쟁점3 : 국민연금에 대한 낮은 신뢰로 사업 참여도가 저조할 것으로 문제제기하지만, 오히려 이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인지도 개선과 노후준비 교육이 필요하다는 반증

- 노후준비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지만, 청년층은 노후준비와 미래설계를 위해 임금을 유보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생계 및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 존재
 - 30대 초반부터 노후 준비를 하면 노후필요자금의 60%이상을 준비하나, 40대 후반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50%도 준비 곤란(KB금융연구소)
 - 성인의 85%가 노후준비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실제 은퇴준비가 부족한 20세 이상 성인은 약 74.7%(김동겸 외, 2013)
- 본 사업과 연계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기금고갈 등을 원인으로 깊어진 국민연금 불신을 회복하고 조기에 노후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미래설계 교육효과 기대
 - 미래세대인 청년들은 기금 고갈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며, 청년은 정규취업 이전 아르바이트 등 가입기회가 존재함에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 가입을 스스로 기피함

II.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경기도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민의 견해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방향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인식조사 실시

- 모바일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오픈서베이(Open survey)’에 의뢰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26일에 모바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3.10\%$)를 진행
 - 특히, 본 사업은 생애주기와 연령기준이 중요한 변수이기에 연령계층을 기준으로 할당하였으며, 직접대상자인 만 18세(250명), 간접대상인 만 15~18세 자녀의 부모(250명), 정책대상이 아닌 20대 청년(500명)으로 구분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을 이용하는 청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바일 설문방식을 채택

〈표 7〉 조사설계 및 진행방법

구분	내용
조사대상	경기에 거주하는 18세(250명), 20대(500명), 15~18세 자녀의 부모(250명)
표본규모	총 1,000개
조사방법	경기연구원에서 작성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모바일) 조사
조사기간	2019년 3월 26일
허용오차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오차는 $\pm 3.10\%$

- 본 사업은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한 지지체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기존 정책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정책수립을 하고자 정책 간의 연결성을 토대로 조사문항을 구성
 - 국민연금과 추후납부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등 기존 정책을 검토하고, 청년대상의 보험료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이용의향 및 필요성, 기대효과, 한계점 등을 조사

〈표 8〉 조사내용구성

구분	설문내용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방식 • 국민연금의 노후준비 기여도에 대한 인식
추후납부제도	• 추후납부제도 인지도 • 추후납부제도 이용의향 및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청년대상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 인지도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 참여의향(18세), 권장(부모), 필요성(20대) 정도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 기대효과,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한 인식
응답자 기초사항	• 학력, 직업(경제활동상태), 월평균 개인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 본 설문조사에 응한 1,000명의 응답자를 몇 가지 기본 특성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9>와 같음
- 18세 및 20대 청년이 전체 표본의 다수(75%)를 차지하여 대졸(대학재학) 비중(75.9%)이 높고 월평균 개인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표본의 절반(49.8%)을 차지
 - 15~18세 자녀를 둔 부모의 직업분포는 비교적 고르게 포진되어 있으며, 중위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구소득 300~600만원의 비중이 높음

<표 9> 응답자 기본 특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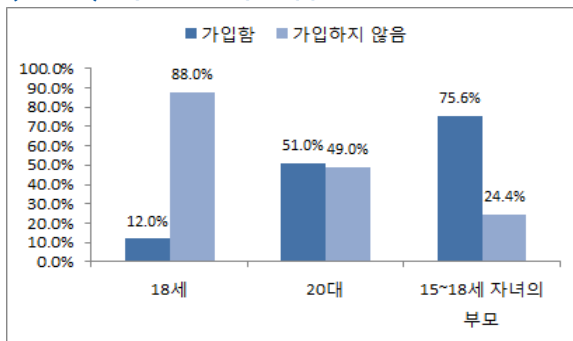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합계		18세		20대		15~18세 자녀의 부모	
성별	남자	450 (45.0)	75 (30.0)		250 (50.0)		125 (50.0)	
	여자	550 (55.0)	175 (70.0)		250 (50.0)		125 (50.0)	
	소계	1000 (100.0)	250 (100.0)		500 (100.0)		250 (100.0)	
직업	사무/기술직	217 (21.7)	3 (1.2)		162 (32.4)		52 (20.8)	
	기능/작업직	21 (2.1)	2 (0.8)		14 (2.8)		5 (2.0)	
	자유/전문직	71 (7.1)	2 (0.8)		35 (7.0)		34 (13.6)	
	자영업	45 (4.5)	0 (0.0)		13 (2.6)		32 (12.8)	
	판매/영업 서비스직	40 (4.0)	0 (0.0)		25 (5.0)		15 (6.0)	
	경영/관리직	47 (4.7)	0 (0.0)		4 (0.8)		43 (17.2)	
	전업주부	67 (6.7)	0 (0.0)		11 (2.2)		56 (22.4)	
	고등학생	64 (6.4)	64 (25.6)		0 (0.0)		0 (0.0)	
	대학생	310 (31.0)	155 (62.0)		155 (31.0)		0 (0.0)	
	대학원생	13 (1.3)	0 (0.0)		13 (2.6)		0 (0.0)	
	무직	66 (6.6)	19 (7.6)		45 (9.0)		2 (0.8)	
	기타	39 (3.9)	5 (2.0)		23 (4.6)		11 (4.4)	
	소계	1000 (100.0)	250 (100.0)		500 (100.0)		250 (100.0)	
학력	고졸 이하	177 (17.7)	96 (38.4)		31 (6.2)		50 (20.0)	
	대졸(재학 포함)	759 (75.9)	152 (60.8)		436 (87.2)		171 (68.4)	
	대학원졸(재학 포함)	64 (6.4)	2 (0.8)		33 (6.6)		29 (11.6)	
	소계	1000 (100.0)	250 (100.0)		500 (100.0)		250 (100.0)	
월평균 개인소득	100만원 미만	469 (49.8)	194 (91.9)		224 (46.5)		51 (20.5)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	158 (16.8)	12 (5.7)		110 (22.8)		36 (14.5)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151 (16.0)	2 (0.9)		110 (22.8)		39 (15.7)	
	300만원이상 400만원 미만	56 (5.9)	1 (0.5)		25 (5.2)		30 (12.0)	
	4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	50 (5.3)	1 (0.5)		7 (1.5)		42 (16.9)	
	500만원이상 600만원 미만	30 (3.2)	0 (0.0)		4 (0.8)		26 (10.4)	
	600만원이상 700만원 미만	9 (1.0)	0 (0.0)		0 (0.0)		9 (3.6)	
	700만원 이상	19 (2.0)	1 (0.5)		2 (0.4)		16 (6.4)	
	소계	942 (100.0)	211 (100.0)		482 (100.0)		24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모르겠음	58 (5.8)	39 (15.6)		18 (3.6)		1 (0.4)	
	100만원 미만	469 (46.9)	194 (77.6)		224 (44.8)		51 (20.4)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	158 (15.8)	12 (4.8)		110 (22.0)		36 (14.4)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151 (15.1)	2 (0.8)		110 (22.0)		39 (15.6)	
	300만원이상 400만원 미만	56 (5.6)	1 (0.4)		25 (5.0)		30 (12.0)	
	4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	50 (5.0)	1 (0.4)		7 (1.4)		42 (16.8)	
	500만원이상 600만원 미만	30 (3.0)	0 (0.0)		4 (0.8)		26 (10.4)	
	600만원이상 700만원 미만	9 (0.9)	0 (0.0)		0 (0.0)		9 (3.6)	
	700만원 이상	19 (1.9)	1 (0.4)		2 (0.4)		16 (6.4)	
	소계	1,000 (100.0)	250 (100.0)		500 (100.0)		250 (100.0)	

2. 연령집단별 「생애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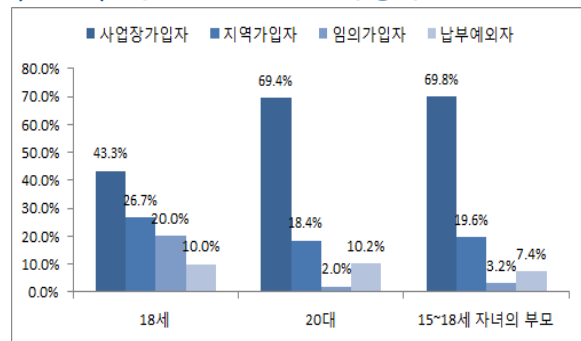
□ 연령별로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납부방식, 추후납부제도 인지도 및 이용의향에 뚜렷한 차이 존재

- 18세 연령집단의 경우 가입률은 매우 낮으나 임의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반면, 20대는 납부예외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18세 연령집단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은 12.0%에 불과하지만 임의가입자 비중이 20.0%로 20대의 임의가입자 비중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
 - 20대 연령집단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은 51.0%로 절반 정도 되며, 가입자의 69.4%가 사업장가입자이며, 납부예외자 비중은 10.2%로 타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그림 7〉 국민연금 가입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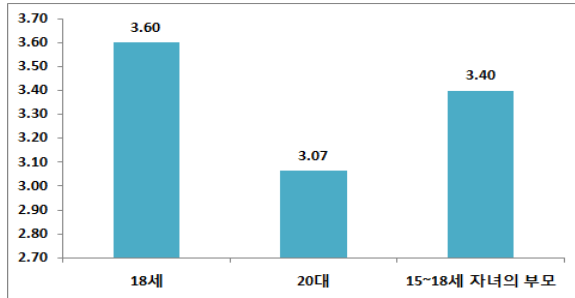
〈그림 8〉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식



- 국민연금이 노후준비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묻는 질문에 대해 18세 연령집단의 응답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추후납부제도 인지도는 18세 연령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국민연금의 노후준비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18세 연령집단은 5점 만점에 3.6점, 20대는 3.07점, 10대 자녀를 둔 부모는 3.40점으로 18세 집단이 가장 높고, 20대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추후납부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한 결과, 추후납부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세 집단은 86.8%, 20대 집단은 71.2%에 달하지만, 1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의 경우는 29.2%만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
- 추후납부제도 이용의향을 묻은 결과 18세 연령집단이 가장 높고, 1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가 가장 낮았으며, 추후납부제도 이용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 불신과 기금고갈 우려를, 1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의 경우 경제적 여건 부족을 주된 이유로 선택
 - 18세 연령집단은 추후납부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지만,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5.6%로 매우 높았으며, 20대 집단은 68.4%, 1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는 64.0%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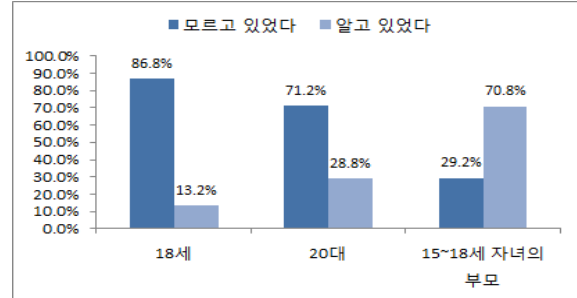
-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를 묻은 결과, 18세 집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경제적 여건 부족, 20대 집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기금고갈 우려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1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의 경우 추후납부에 대한 경제적 여건 부족을 가장 많이 선택

〈그림 9〉 국민연금의 노후준비에 대한 기여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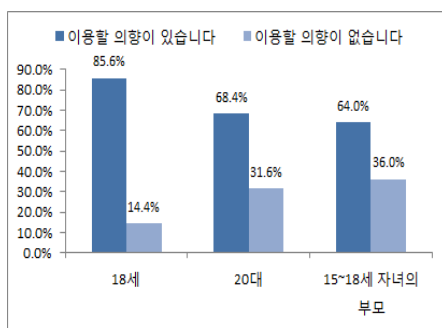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기여도가 높다고 인식(평균은 3.28(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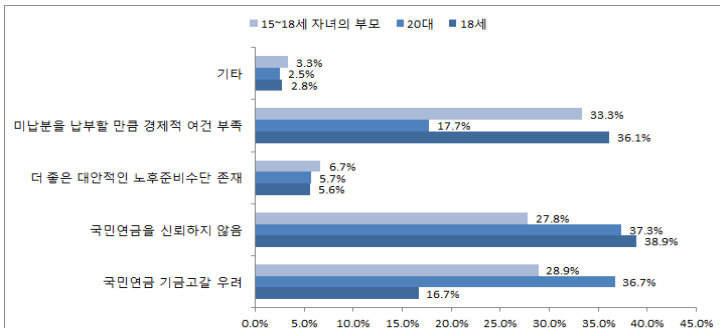
〈그림 10〉 추후납부제도 인지도



〈그림 11〉 추후납부제도 이용의향



〈그림 12〉 추후납부제도 이용의사가 없는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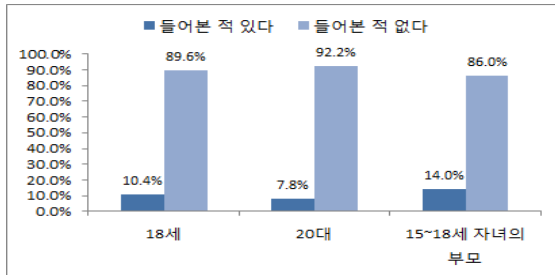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전 연령대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사업의 참여의향과 사업의 기대효과는 18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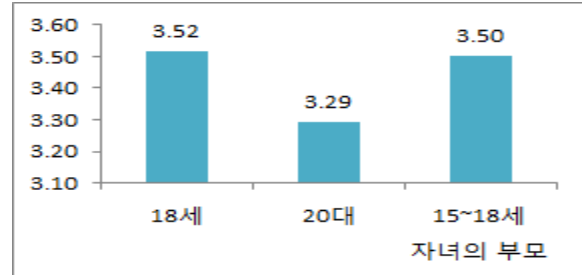
- 대부분의 응답자가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인 18세 응답자의 경우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4%에 불과하며, 10대 자녀를 둔 부모집단의 경우에도 14.0%만이 사업에 대해 인지
- 하지만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 참여의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18세 연령집단에서 참여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사업 대상인 18세 연령집단에게는 사업 참여의향을 물었으며, 사업 대상이 아닌 20대 응답자들에게는 사업의 필요성, 1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에게는 자녀에게 사업 참여를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
 - 조사 결과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인 18세 연령집단은 사업 참여의향이 5점 만점 중 3.52, 10대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3.50으로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집단에서는 사업의 인지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남

- 반면 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20대 응답자들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을 묻은 결과 5점 만점 중 3.2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13〉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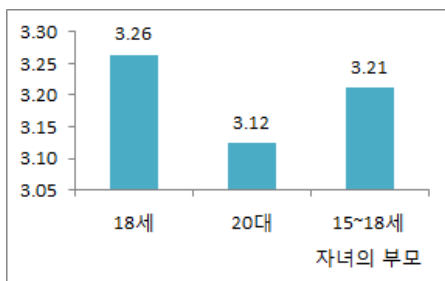
〈그림 14〉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 참여의향



주 : 점수가 높을수록 18세는 참여의향, 20대는 필요성, 부모는 권장의향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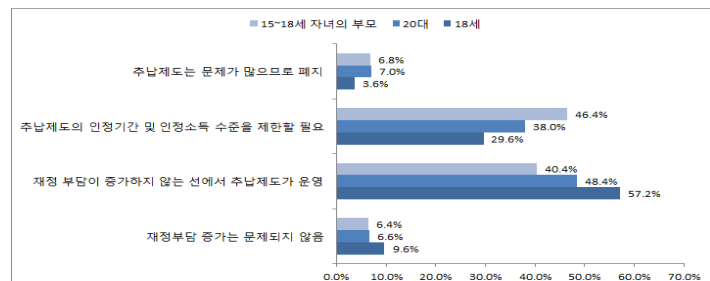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은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묻은 결과 18세 연령집단과 10대 자녀를 둔 부모집단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은 지역 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응답한 비중이 18세 연령집단은 5점 만점에 3.26, 1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는 3.21, 20대 연령집단은 3.12로 나타남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사업 참여의향이 높은 18세 연령집단과 1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에서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이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문제인지 묻은 결과, 대다수 응답자는 추납제도의 이용범위를 제한해서 재정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소수의 응답자들만이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으로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증가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나 문제가 많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
 - 대다수 응답자들은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추납제도가 운영되거나 혹은 추납제도의 인정기간 및 인정소득 수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그림 15〉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형평성 문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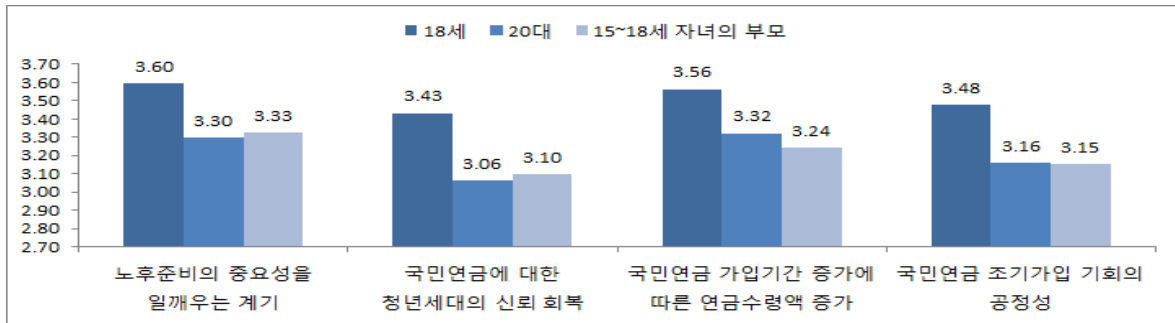
주 : 점수가 높을수록 형평성 문제에 동의

〈그림 16〉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재정 부담 문제 인식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18세 연령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은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질문에 18세 집단은 5점 만점에 3.60으로 긍정적 기대가 높은 편인 반면, 20대 집단은 3.30, 1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는 3.33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질문에 18세 집단은 5점 만점에 3.43을 나타낸 반면, 20대는 3.06, 1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는 3.10에 불과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령액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질문에 18세 집단은 3.56을 나타낸 반면, 20대는 3.32, 1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는 3.24에 머물고 있음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은 국민연금 조기가입 기회를 공정하게 늘릴 것이다’ 라는 질문에 18세 집단은 3.48을 나타낸 반면, 20대는 3.16, 10대 자녀를 둔 부모는 3.15에 불과

〈그림 17〉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 기대효과



주 :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의 기대효과를 높게 평가 [노후준비(3.38), 신뢰회복(3.16), 연금액 증가(3.36), 기회의 공정성(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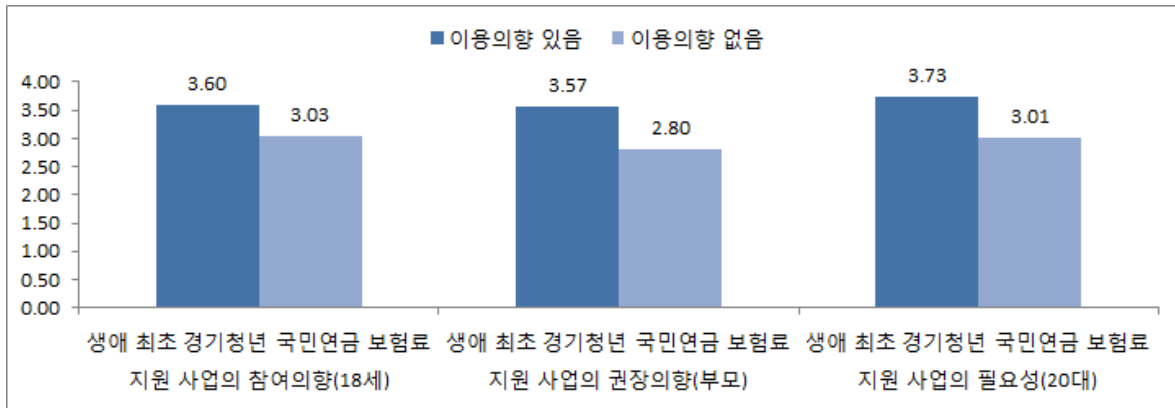
3.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이용의향에 따른 「경기도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 인식

□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이용의향과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 참여의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

- 18세 연령집단의 경우 추후납부제도 이용의향이 있는 집단은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 참여의향도 5점 만점에 3.60으로 높은 반면, 추후납부제도 이용의향이 없는 집단은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 참여의향이 3.03에 불과
- 10대 자녀를 둔 부모집단의 경우에는 추후납부제도 이용의향이 있는 집단은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5점 만점에 3.57인 반면, 이용의향이 없는 집단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2.80에 불과

- 20대 연령집단의 경우 추후납부제도 이용의향이 있는 집단은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5점 만점에 3.73으로 매우 높은 반면, 이용의향이 없는 집단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3.01에 불과
- 20대 연령집단은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연령집단이지만 추후납부제도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 청년국민연금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8〉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참여(권장)의향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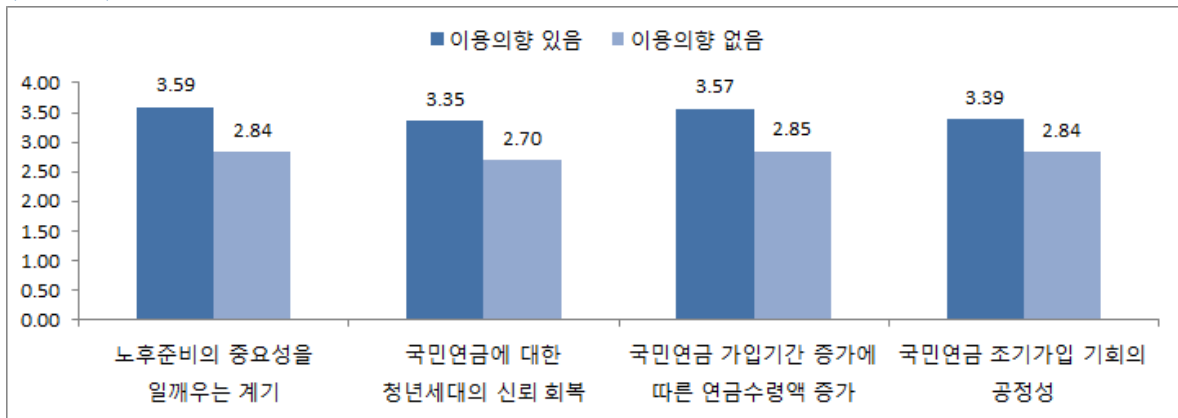


주 :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의 필요성 및 참여(권장)의향이 높음을 의미

□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이용의향과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기대효과 사이에도 뚜렷한 상관관계 존재

-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이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이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응답
 -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가로 연금수령액도 증가할 것이고, 국민연금 조기가입 기회의 공정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
- 반면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이용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은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응답
 -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가에 따른 연금수령액 증가, 국민연금 조기가입 기회의 공정성 증가 등 모든 영역에서 응답값이 3점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19〉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기대효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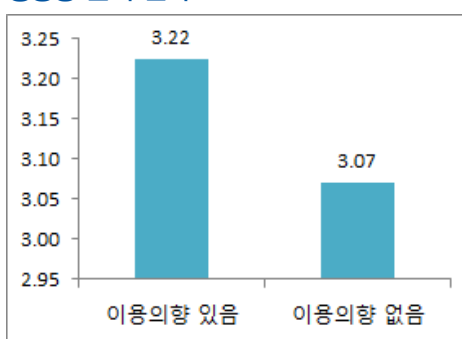


주 :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의 기대효과를 높게 평가

□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이용의향이 있는 집단은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이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나 재정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도가 운영되길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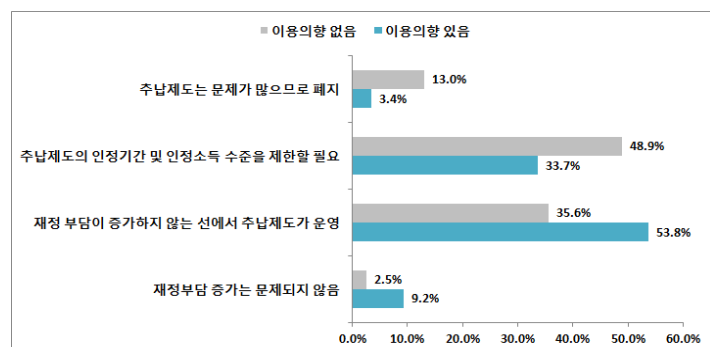
-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이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이 지역 간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이용의향이 없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이용의향이 있는 집단은 지역 간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3.22인 반면, 이용의향이 없는 집단은 3.07에 불과
- 대부분의 응답자는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으로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원치 않으나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
 - 추후납부제도에 대한 이용의향이 있는 집단은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이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반면, 이용의향이 없는 집단은 추후납부제도의 인정기간 및 인정소득 수준을 제한할 필요가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20〉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형평성 문제 인식



주 :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인식이 높음을 의미

〈그림 21〉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재정 부담 문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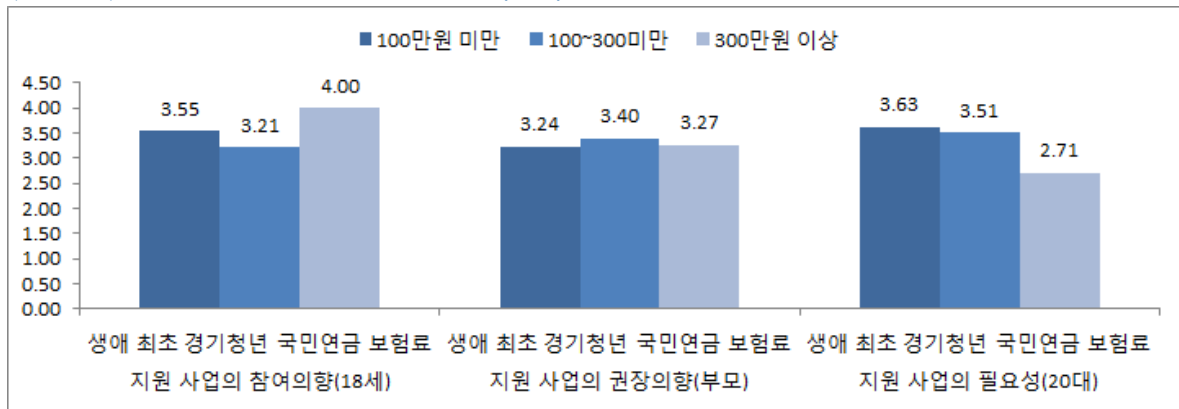


4. 개인소득수준별 「경기도 생애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 인식

□ 개인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에 참여의향이 높은 편

- 만 18세 연령집단의 경우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집단은 사업 참여의향이 5점 만점에 3.55, 300만원 이상인 집단은 4.00으로 높은 편임
 - 월소득 100이상 300만원 미만 집단은 사업 참여의향이 3.21로 낮은 편임
- 20대 연령집단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업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응답
 -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은 사업의 필요성 정도가 5점 만점에 3.63정도로 나온 반면, 3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사업 필요성 정도가 2.71에 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대조적인 경향을 보임
- 1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의 경우는 소득수준에 따른 사업 참여 권장의향에 큰 차이가 없음

〈그림 22〉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참여(권장)의향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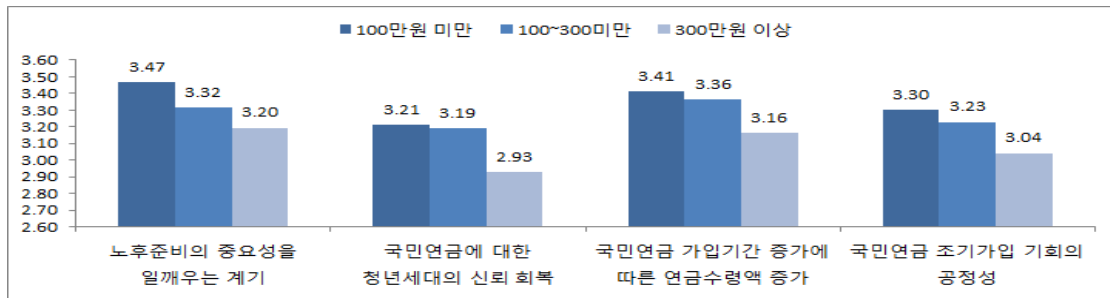


주 :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의 필요성 및 참여(권장)의향이 높음을 의미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에 거는 기대가 더 큰 편임

- 소득수준에 따라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에 대해 거는 기대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
 -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이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
-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노후준비의 중요성, 연금수령액 증가, 조기가입 기회의 공정성 등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월소득 1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에 대한 기대 수준이 5점 만점에 3.47,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가에 따른 연금수령액 증가에 대한 기대 수준이 3.41, 국민연금 조기가입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 수준이 3.30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소득수준 3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기대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3〉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기대효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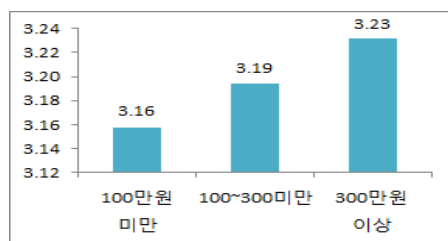


주 :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의 기대효과를 높게 평가

□ 소득이 낮을수록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기대효과는 큰 반면, 부정적 효과는 낮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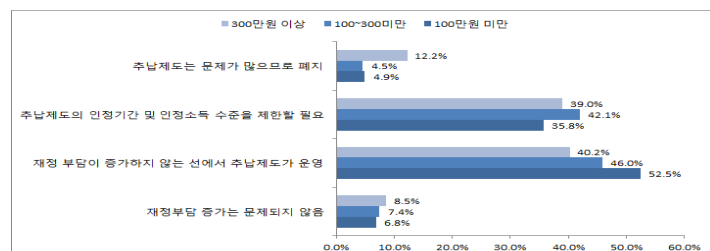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심각하게 인식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청년국민연금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형평성 문제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형평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인식
 - 저소득 계층은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으로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재정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을 운영하면 된다고 응답
 - 300만원 이상 소득계층의 경우 추납제도는 문제가 많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에서는 재정 부담의 문제가 있다면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응답
- 저소득 계층일수록 사업의 기대효과는 큰 반면, 부정적 효과는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편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부정적 효과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소득수준에 따라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에 대한 태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4〉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형평성 문제 인식



주 :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인식이 높음을 의미

〈그림 25〉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재정 부담 문제 인식



III. 제도분석

1. 효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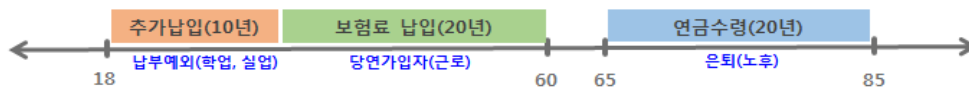
□ 「경기도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 도입에 따른 효과성 및 실효성을 예측하기 위해 도입 전후로 소득대체율과 재정 부담을 산출

- 국민연금 추가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 및 재정지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급여산식의 계수들에 대한 가정이 필요
 - 첫째, 이미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10년을 추가 납부한 후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전제
 - 둘째, 2019년 현재 만 18세 청년들의 은퇴예상시점인 2060년 이후 소득대체율과 재정지출 규모를 계산하여야 하지만 추계상의 어려움 때문에 여기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추납과 함께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
 - 셋째, 급여 계산을 위해 2019년 기준으로 A값은 2,356,670원, 소득대체율은 44.5%(소득대체율 상수는 1.335)을 적용

【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계산 산식(연간 지급액) 】

$$\text{소득대체율상수} \times (A+B) \times (1+0.05 \times n/12)$$

A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예상연금수령액(개인)

- 가입자 개인을 기준으로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B값)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에 대한 예상연금수령액 계산
 - 추가납부 10년에 따른 월연금수령액 인상효과를 보면,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 수준이 50만원인 가입자는 매월 157,578원을 더 받는 반면, 소득수준이 400만원인 가입자는 매월 350,643원을 더 받게 됨
 -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간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입자 1인당 추납에 따른 소득증가 효과는 각각 50만원 소득자 32,463,740원, 100만원 소득자 33,728,115원, 200만원 소득자 36,256,865원, 300만원 소득자 38,785,615원, 400만원 소득자 41,314,365원 증가

〈표 10〉 소득분포 가정에 따른 연간 추가 재정지출 규모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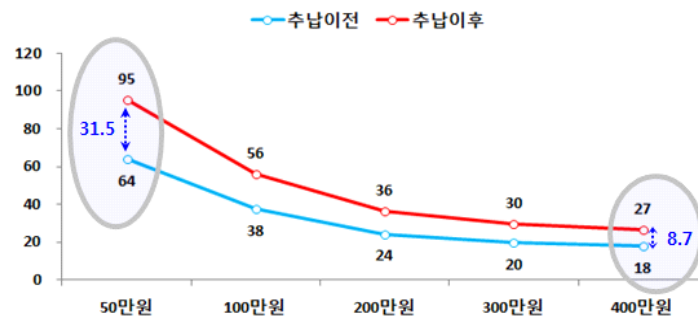
소득 (B값)	보험료 총액(20년 납부)			총 연금수령액(20년 수령)			월 연금수령액(1개월)		
	추납이전 (A)	추납이후 (B)	차액 (B)-(A)=(a)	추납이전 (A')	추납이후 (B')	차액 (B')-(A')=(b)	추납이전 (C)	추납이후 (D)	차액 (D)-(C)=(d)
50만원	10,845	16,200	5,355	76,590	114,409	37,818	319	476	157
100만원	21,690	32,400	10,710	89,996	134,434	44,438	374	560	185
200만원	43,380	64,800	21,420	116,807	174,484	57,676	486	727	240
300만원	65,070	97,200	32,130	143,619	214,534	70,915	598	893	295
400만원	86,760	129,600	42,840	170,430	254,584	84,154	710	1,060	350

□ 소득대체 효과

- 추납에 따른 소득대체율 인상 규모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추납제도 이용에 따른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소득보장 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소득대체율은 소득수준 50만원인 가입자는 추납 이전 63.8%에서 추납 이후 95.3%로 31.5% 증가하는 반면, 400만원인 가입자는 17.8%에서 26.5%로 8.7% 인상
 - 저소득층일수록 추납제도 이용에 따른 소득대체율 증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26〉 소득수준별 추납에 따른 소득대체율 변화

(단위 : %)



□ 재정 효과²⁾

- 사업대상자 157,483명이 모두 10년을 추납했다고 가정할 경우, 추납에 따른 연간 재정지출 순증가 규모는 대략 2,829억 원 정도로 추정됨
 - 2018년 10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분포를 반영하여 50만원 14.5%, 100만원 36.4%, 200만원 20.2%, 300만원 10.8%, 400만원 18.0%로 가정

2) 국민연금은 국가재정 지출이 없는 사회보험제도이지만 편의상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부담을 재정지출로 간주

- 국민연금 연간 재정지출(연간연금지급액-연간보험료) 규모가 추납 이전 총 5,730억 원에서 추납 이후 8,559억 원으로 2,829억 원 정도 증가

〈표 11〉 소득분포 가정에 따른 연간 추가 재정지출 규모

구분	소득구간					총계
	50만원 소득자	100만원 소득자	200만원 소득자	300만원 소득자	400만원 소득자	
추납이전(A)	750	1,957	1,167	667	1,185	5,730
추납이후(B)	1,121	2,924	1,744	997	1,771	8,559
차액(B-A)	370	966	576	329	585	2,829

주1 : 내용입력추납보험료 증가분에 대한 기금운용 수익분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음

주2 : 사업대상자 157,483명이 모두 10년을 추납하였다고 가정한 연간 재정지출

주3 : 소득분포에 따른 인구비중은 통계(2018.10)를 반영하여 50만원 14.5%, 100만원 36.4%, 200만원 20.2%, 300만원 10.8%, 400만원 18.0%로 가정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 사업으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엄밀한 재정추계가 요구됨
 - 앞에서 계산한 추가 재정지출 규모는 현재 시점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분포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자 모두가 추납제도를 현재 시점에서 활용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해석상 주의가 요구됨
 - 실제로는 사업대상자 모두가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간 추후납부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앞에서 계산한 재정 부담 규모는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추가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규모를 엄밀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납제도 이용 여부나 활용 시점 등에 대한 추정을 바탕으로 별도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의 추후납부제도 운영사례

□ 한국의 추납 확대 기조와 달리, 외국에서는 인정기간 및 신청기한, 인정범위를 특정 사유로 구체화하고 추납보험료 산정기준도 단일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제한적³⁾

- (벨기에) 추납 인정범위는 학업과 경력단절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은 단일한 기준소득월액인 최저보장임금액을 적용하고 고용상태에 따라 보험료 비율에 차등
 - 학업기간·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 고용계약을 맺었으나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 등에 대해 추납을 허용하며, 특히 경력단절기간은 경력단절수당을 받음에도 고용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인 경우와 대학 수학기간·박사학위 논문 준비기간·직업훈련 기간 등 전체 학업소요기간의 경우를 실업과 마찬가지로 경력 인정기간으로 간주
 -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 소득은 월 최저보장임금이 적용되고, 고용상태와 기간에 따라 7~16.3%의 보험료 부과되며 최대 5년까지 분할하여 납부 가능

3) 추납신청자에게 단일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추납보험료 선택을 원천 차단함을 의미

〈표 12〉 벨기에의 추후납부제도 운영 사례

구분	내용
추납 인정범위	20세 이후에 완료한 학업기간 20세 이후의 경력단절기간 - 연금기여가 공제되지 않은 경제활동기간
추납 대상기간	- 학업기간 : 박사학위 논문 준비기간은 2년을 인정하되 수료한 직후 최대 2년만 허용함 - 경력단절기간 : 첫 12달은 자동적으로 조정되고, 6세 미만인 첫 아이의 경우 최대 24개월, 둘째 자녀 이후에는 최대 60개월 까지 추납 허용
추납 신청기한	20세 이후에 완료한 학업기간의 경우, 추납사유 발생 이후 10년 이내에 신청을 접수해야 함 - 경력단절 기간의 경우 신청자격을 부여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추후납부를 신청해야함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20세 이후에 완료한 학업기간에 대한 추납보험료는 월평균 최저보장임금에 기초해서 연 단위로 계산되며, 보험료율은 7.5% 적용 - 경력단절기간에 대한 추납보험료는 직전 년도의 일 단위 평균 임금에 근거해서 보험료가 계산되고, 만약 직전년도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가장 최근 년도의 최소 75일에 대한 평균 임금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계산하거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년도의 일평균 임금에 기초해서 보험료를 계산함 (보험료율은 7.5%) - 연금기여가 공제되지 않은 활동기간에 대한 추납보험료는 최저보장 월 평균 임금에 기초해서 계산되고, 고용상태나 기간에 따라 7~16.3%까지 상이한 보험료율이 적용됨

자료 : 유학원(2016),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정책과제와 대안 검토” 『연금포럼』, (62) : 46-62

- (프랑스) 비교적 다양한 사유에 대한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추납 사유 별로 적합한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다르게 마련
 - 해외 고용으로 인한 연금보험료 미납 기간, 고등교육기간, 불완전한 경력 기간, 모성보호활동, 수습기간, 자연 납부로 인한 추후납부, 특별 추후납부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해 추납을 허용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은 추납 사유에 따라 다양하게 기준을 두고 있으며, 예컨대 직업훈련기간은 2015년 기준으로 1분기에 €380.40 적용하고, 가입이 지연된 직업군에 소속된 기간, 수감기간, 대학교육기간은 추후납부 신청 직전 3년간 근로소득, 보험료 선택 사항, 연령 등에 근거하여 결정

〈표 13〉 프랑스의 추후납부제도 운영 사례

구분	내용
추납 인정범위	- 총 기여이력이 수급권 획득을 위해 요구되는 가입기간보다 짧은 경우 - 해외에서 고용되어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 - 구 프랑스 식민지에서 고용된 기간 - 일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가입이 지연된 직업군 - 수감기간 - 가구원 중 제3자인 약자·장애인을 위한 돌봄기간 - TB care 수당 수급 기간 - 프랑스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제기구에 소속된 기간 - 대학교육기간 3년 이상 고용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확인된 보험료 미납 기간 1972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참여한 도제기간에 대해 확인된 보험료 미납 기간 - 직업훈련기간 - 산모도우미 활동 및 실습 기간

추납 대상기간	• 대학교육기간 : 연간 4분기씩, 최대 12분기 • 산모도우미 활동 및 실습기간 : 보호활동기간의 경우 12분기, 실습기간의 경우 4분기 • harkis, moghaznis의 자녀와 프랑스 군 잔류부대 구성원의 경우 : 최대 4분기 • 직업훈련기간 : 인턴십 과정 중 최대 2분기까지
추납 신청기한	• 일반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가입이 지연된 직업군에 소속된 기간: 강제보험 가입 후 10년 이내 • 교도소 수감기간: 강제보험 가입 후 또는 출소 후 10년 이내 • 가구원 중 제3자인 약자·장애인을 위한 돌봄기간: 돌봄 활동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 • 프랑스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제기구 소속기간: 국제기구 활동 종료 이후 6개월 이내(OECD 활동의 경우 신청제한기간 없음) • 대학교육기간 : 졸업 후 10년 이내 • 3년 이상 고용이력 있을 시의 보험료 미납기간: 추납 사유가 발생한 즉시 신청하거나, 고용계약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 직업훈련기간 : 인턴십 과정 이후 2년 이내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 해외에서 고용되어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 일반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가입이 지연된 직업군에 소속된 기간, 수감기간, 대학교육기간 : 추후납부 신청 직전 3년간 근로소득, 보험료 선택 사항, 연령 등에 근거하여 결정(1955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출생년도에 따라서 추납보험료 증가) • 가구원 중 제3자인 약자·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기간, TB care 수당 수급기간: 추납신청기간에 해당된 고정임금에 연금보험기여율을 적용 • 3년 이상 고용이력 있을 시 보험료 미납기간, 도제기간 중 보험료 미납기간: 실제 임금에 기초하여 결정(비임금노동자는 정액보험료) • 직업훈련기간 : 2015년 기준, 1분기에 €380.40

자료 : 유화원(2016),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정책과제와 대안 검토" 『연금포럼』, (62) : 46-62

□ 한국은 원하는 시점(은퇴직전)에 자의적으로 가입종(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 등)과 기여액을 선택하여 제도에 편입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 (추납 인정범위) 대부분의 보험료 미불입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허용하여 개인의 생애 간 재분배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에 위배
 - 현행 우리나라의 추후납부제도는 대부분의 보험료 미불입기간(납부예외·적용제외 등)에 대해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추납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인정범위가 제한적
- (추납 인정기간 및 신청기한) 현행 제도의 추납신청은 연금수급 전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하기에 근로활동시기에 미리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존재
 - 현행 우리나라의 추후납부제도는 대부분의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납을 허용하고, 추납사유 발생 이후 별도의 신청기한을 두지 않는 운영방식
 - 소득활동 시기에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다 추후 은퇴시기가 다가왔을 때 추납을 활용하여 쉽게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부정 이용사례 발생
-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소득)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은 신청일이 속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신고소득과 추납보험료를 조정할 여지가 발생하여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초래
 - 신청자가 가입종(사업장·지역·임의·임계)이나 소득월액이 변동되는 시점에 맞춰 추납을 신청하는 부정 이용사례 발생

IV. 정책제언

1. 요약

□ 「경기도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세대들에게 국민연금 조기가입 유도를 통해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
 - 청년세대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경우가 많으며,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 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들이 추후납부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 추후납부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추후납부제도를 알고 있고, 추후납부가 가능한 계층만 이용하고 있어서 정보격차와 경제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실제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성남시 등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직업군을 중심으로 추후납부 제도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심각
 - 경기도는 도내 거주 만 18세 청년 모두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현행 추후납부제도 하에서 정보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 만 18세 연령집단과 1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에서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이 높으며, 저소득층일수록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사업 참여의향은 높은 편으로 나타남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10% 정도에 그침
 - 하지만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에 참여할 의향 혹은 사업 필요성을 묻은 결과,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인 만 18세 연령집단과 1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에서는 사업 참여 혹은 참여 권장 의향이 각각 5점 만점에서 3.52, 3.50으로 높게 나타남

-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20대 연령집단은 사업 필요성이 3.2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연령집단별로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만 18세 연령집단에서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게 나타남
 - 만 18세 연령집단은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이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회복, 가입기간 증가에 따른 연금수령액 증가, 국민연금 조기가입 기회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
 - 반면 20대 연령집단과 1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의 경우에는 경기도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기대효과는 큰 반면, 부정적 효과는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대체로 월소득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에서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 참여의향 혹은 사업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반면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심각하게 인식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으로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은 추납제도는 문제가 많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저소득계층에서는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2. 정책제언

□ 「경기도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만 18세 연령집단과 저소득계층에서 참여의향이 높고 긍정적 기대가 높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필요성과 의의는 높은 편

-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인 18세 연령집단과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기대수준이 높은 편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인 만 18세 청년 집단이 사업 참여의향이 가장 높고, 10대 자녀를 둔 부모 집단도 자녀에게 사업 참여를 권유할 의향이 높게 나타남
 - 만 18세 연령집단과 저소득 계층은 정책 기대효과 측면에서도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 개선, 국민연금 신뢰구축, 가입기간 증가에 따른 연금수령액 증가, 조기가입 기회의 공정성 확대 등 모든 영역에서 정책 호응도와 기대수준이 높은 편임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은 젊은 층과 저소득 계층 등 추납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계층에게 정책 홍보를 통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현재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이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소수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은 정보력 격차에 따른 불공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적어도 추납제도를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나 사회보험 운영원리 훼손 등의 문제는 사실상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은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현행 추후납부 제도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문제임
 - 현행 추후납부제도는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소수만이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계층 간 형평성과 사회보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은 적어도 정보력 격차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추납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한, 경기도는 추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민들이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현행 추후납부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외국의 경우처럼 추납제도를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
 - 추후납부의 인정기간이나 인정소득 등을 학업기간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추납 인정소득도 최저소득 수준으로 한정함으로써 추납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일차적인 의의는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대책 마련 필요
 - 학업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납제도 등을 이용해서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
 - 반면,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사업의 목표가 추납제도 활용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추납제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제도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할 필요 있음
- 청년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청년층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 있음

- 20-24세 연령계층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더라도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
- 적어도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이러한 목적에 맞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청년층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완대책으로 국민연금 성실납부 청년에 대한 지역화폐 포인트 지급,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등 연계사업 발굴 필요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사회보험 원리 훼손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 필요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은 전문가들로부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사회보험 원리를 훼손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음
 - 또한 국민연금 조기가입으로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증가하지만 정작 저소득층은 추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후보장의 불평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받음
 - 하지만 설문결과 사업의 대상인 만 18세 청년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의향이 높은 편이고, 기대효과도 상대적으로 큰 편임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청년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회복과 노후준비 교육 등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포인트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국민연금의 사회보험 운영 원리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는 노력이 중요
 -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협조를 통해 국민연금 청년가입자들이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 기간에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활동을 실시
 - 청년 국민연금 성실납부자들에게는 지역화폐 포인트 지급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 있음
 - 현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실업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출산크레딧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사업은 부족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과 함께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 경제적 격차에 따른 추납제도 이용 문제를 해소하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 청년들의 노후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시행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소득 청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국민연금사업을 토대로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긍정적 효과가 크다면 타지자체로 확산시키는 노력 필요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은 2019년-2022년 4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책실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 평가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사업을 전국화시킬 필요 있음
 - 당장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도가 3-4년간 한시적으로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
 - 청년층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을 통해 정책효과를 살펴보고, 실제로 청년들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에 도움이 된다면, 향후 타지자체로 확산 등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 있음
- 청년세대의 사업 참여의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의 필요성 인식 개선, 청년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구축, 가입기간 증가에 따른 연금수령액 증가효과, 국민연금 조기가입 기회의 공정성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타당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가입 연령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가 광범위한 편이어서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은 청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시적인 정책실험으로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정책효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타지자체로 확산시킬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추후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규모를 엄밀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납제도 이용 여부나 활용 시점 등에 대한 추정을 바탕으로 별도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추후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부담 규모 추계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연구원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문8) 경기도 만 18세 청년들에게 1회에 한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들어본 적 있다 ② 들어본 적 없다

문9) [본 문항은 ‘18세’만 응답해주시시오.] 경기도가 추진하는 “생애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으로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향후에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할 수 있는 납부기간이 길어진다면, 귀하는 어느 정도 추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의향이 없다		보통이다			매우 의향이 있다	
← →						
①()	②()	③()	④()	⑤()		

문10) [본 문항은 ‘15~18세 자녀를 둔 부모’만 응답해주시시오.] 경기도가 추진하는 “생애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으로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향후에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할 수 있는 납부기간이 길어진다면, 귀하는 귀하의 자녀에게 국민연금 추납을 권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의향이 없다		보통이다			매우 의향이 있다	
← →						
①()	②()	③()	④()	⑤()		

문11) [본 문항은 ‘20대’만 응답해주시시오.] 경기도가 추진하는 “생애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으로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향후에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할 수 있는 납부기간이 길어진다면, 귀하는 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의향이 없다		보통이다			매우 의향이 있다	
← →						
①()	②()	③()	④()	⑤()		

문12) “생애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이 제시된 기대효과가 얼마나 높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	①()	②()	③()	④()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신뢰 회복	①()	②()	③()	④()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가에 따른 연금수령액 증가	①()	②()	③()	④()
국민연금 조기가입 기회의 공정성	①()	②()	③()	④()

I06) 현재 귀하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가구소득 : 가구의 개별 구성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의 모든 수입을 의미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⑦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⑧ 700만원 이상
- ⑨ 모름

I07) 현재 귀하의 월평균 개인 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⑦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⑧ 700만원 이상
- ⑨ 모름

◆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